무거운 빚 가볍게 '바꿔드림론'…광주·전남 1만5135명 혜택

캠코 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

채무 조정·저리 전환·금융소외 계층에 소액대출 등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근로 빈곤층 자립지원도

캠코는 서민들의 채무경감과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넘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상담 창구 모습.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과 채무조정이 서민층 채무경감의 '빛줄기'가 되고 있다. 시행 초기 '일부 채무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벗어나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서민들의 채무경감과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넘어 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래로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된 장기연체채권의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따라 조정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원금 기준 최소 30% 최고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총 449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469억원 상당의 감면을 받아 과중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났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카드론과 제2·3금융권 등에서 받은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6.5~10.5%대의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2015년 9월 현재까지 총 7684명에게 834억여원을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급전을 빌리지 못했던 금융소외계층을 돕는 캠코 광주전남본부의 소액대출 역시 큰 도움이 됐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총 2960명이 10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별화된 접근으로 가능했다. 지역거점은행인 광주은행과 국민행복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꿔드림론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은행은 대출담당 직원을 캠코 창구로 파견, 아예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장소에서 지원자들을 상담했다. 전국에서 캠코 광주전남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국민행복기금 2주년을 맞은 캠코는 최근 창조경제시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서민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약접수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민에게 보다 친근한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정부 3.0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재산형성저축 지원사업인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드림셋)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드림셋'은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고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을 통해 자립 촉진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희망자 및 가구원 또는 신용회복지원자 중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서 관할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심사를 통과한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사람이다. 시범사업에 한해 희망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60%이하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김영봉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가계부채와 서민경제 불황이 어느 때보다 문제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면서 "더불어 지역민들을 위한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사회공헌활동도 부지런히 펼쳐 '행복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평동산단, 광주 최대 산단 만든다

첫 민자 유치 방식 3차 추가 개발…3천억 투입 2019년 6월 완공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평동산업단지가 민자유치를 통해 확대 조성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연말부터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1996년 조성된 1차 단지(269만㎡)와 2010년 준공한 2차 단지(217만㎡)에 이어 3차 단지 조성사업이다.

광주시가 직접 조성을 하거나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자유치를 통한 첫 번째 사업이다.

광산구 연산동과 월전동 일대 175만3000㎡를 1,2단계로 나눠 2019년 6월까지 조성한다. 보상비와 조성비 등 2966억원이 투입되며, 사업비 중 51%는 건설사 등 민간자본이 부담한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며 자본금(50억원) 중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49%를 출자했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수립,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자금을 조달해 공사와 분양 등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2006년 광산구 진곡산단(191만㎡)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자 부도로 결국 시가 맡게 돼 이번 평동3차 조성사업이 사실상 첫 민자사업인 셈이다.

이번 3차 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661만㎡에 달해, 하남산단 594만㎡보다 60여만㎡가 넓은 광주 최대 산단이 된다.

양효섭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SPC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평동3차 단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불과하는 등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입주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폭스바겐 거짓·부정 확인 땐 한국도 리콜 가능

환경부, 디젤 4종 정밀 검사…전세계에 파장 확산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제조사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도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도가 더 높은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23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에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디젤차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배출가스 인증은 해당 차가 전문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인받는 절차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매출액에 연동해 책정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 이전에 판매된 차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4.64 (-37.42)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1)
▼ 코스닥 680.28 (-13.39)
▲ 환율 (USD) 1191.20원 (+12.00)

금호고속 임단협 타결

임금 3.3% 인상 합의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 노사는 23일 임금 3.22%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협약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금호고속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 3.22% 등에 합의했다.

금호고속 노사는 지난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모두 약 18차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안을 내놨다. 그동안 KTX 호남선 개통, 메르스 등의 영향과 업계불황에 따라 노사는 임금인상폭을 놓고 교섭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이 감소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자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에 노사가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